

# 한국은 독일식 통일을 해낼 여력이 있는가?<sup>1)</sup>

마크 피아졸로(Marc Piazzolo) / 독일 Dresdner은행 경제분석관<sup>2)</sup>

## 남북한의 상반된 경제적 추세

1996년 12월 남한은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였다. 새로운 선진국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800 달러에 달하고 있어, 최근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체코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남한 수준의 60%에 머물게 될 것이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충 비슷하였다. 당시 북한의 경제적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북한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화도 비교적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 오직 인적 자본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갖고 있던 남한에 비하면 좋은 조건이었다. 1 km<sup>2</sup>당 인구가 452 명(1995년 통계)에 달하고 있는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0 년간

에 걸친 자력갱생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정치·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데 반해, 남한은 수출 지향적 전략과 고도의 물적·인적 자본 형성 덕분에 매년 평균 8% 이상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 전 종식 이후 북한에 비해 훨씬 가난했던 남한이 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이미 북한을 따라잡았던 것이다.

북한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어, 매년 GDP가 4.5% 정도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한은 연평균 7.6%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양자간 경제적 격차는 계속 벌어져왔다. 1995년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960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측 1인당 국민소득의 10%도 안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남한 인구가 북한의 2 배에 달하기 때문에, 남한의 국내 시장은 북한에 비해 20 배 이상 크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1996년 4,920억 달러의 GDP를 자랑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

1) 본 고의 원제는 "Could South Korea Afford German-style Reunification?"이다. 영문판 원고 및 자세한 참고 문헌을 위해서는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vol.2, no.2, pp. 48~63을 참조.

2) 본 고는 저자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Dresdner Bank Trends*(1996. 12), pp. 9~15에 게재되었던 "North and South Korea: Could they afford German-style reunification?"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로 비교해도 스페인의 뒤를 이어 당당히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 동서독보다 더 벌어진 남북한의 구조적 격차**

통일 이전 독일의 경제력과 한국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구동독의 인구는 구서독 인구의 25% 정도였던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구 동서독간의 경제력 차이는 남북한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게다가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구 동서독은 남북한에 비해 훨씬 더 부유

했다.

공공 부분의 규모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격차는 구 동서독에 비해 더 크다. 남한의 경우 공공 지출은 GNP의 22%가 안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반면, 구서독의 경우는 공공 지출이 GNP의 45% 정도를 차지했으며, 구동독의 경우에도 사유 경제 부분이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다른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작은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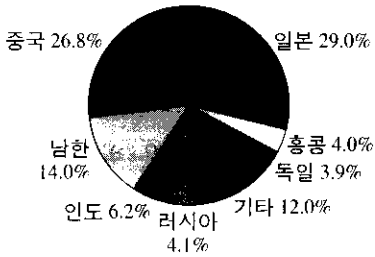
〈표 1〉 경제 지표 비교: 남한/북한(1995) 대 구서독/구동독(1989)

	남한	북한	남한/북한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구동독
인구(백만 명)	44.9	23.3	1.9	62.1	16.6	3.8
GNP(10억 달러)	451.7	22.3	20.3	1,207	96	12.6
1인당 국민소득(달러)	10,067	957	10.5	19,283	5,840	3.3
연간 경제 성장률 (1990~95년, %)	+7.6	-4.5				
공공 지출(10억 달러)	97.1	19 <sup>e</sup>	5.1	547.7	61.8	8.9
(GNP 점유율, %)	(21.5)	(85)		(45.5)	(64.4)	
국방비(10억 달러)	14.3	5.1	2.8	28.5	11.2	2.6
(GNP 점유율, %)	(3.2)	(23)		(2.4)	(11.6)	
1인당 국방비(달러)	318	218	1.5	459	675	0.7
해외 교역(10억 달러)	260.2	2.05	126.9	611.1	47.0	13.0
(GNP 점유율, %)	(57.6)	(9.2)		(50.6)	(49)	
수출(10억 달러)	125.1	0.74	169	341.3	23.7	14.4
수입(10억 달러)	135.1	1.31	103	269.8	23.3	11.5
외채(10억 달러)	79	11.8	6.6	106.7	22	4.9
(GNP 점유율, %)	(17.5)	(53)		(8.8)	(23)	

자료: 통일원, 한국은행, 독일연방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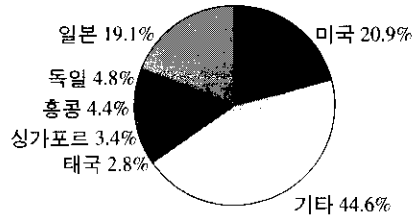
주: e는 자체 추정치.

〈그림 1〉 북한의 교역 상대국(1995년 총교역중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남한의 교역 상대(1995년 총교역중 점유율)



자료: 한국은행

년 전 한국전쟁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거대한 국방 예산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의 경제력 수준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국방비는 구동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의 수출 지향적 전략은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12% 이상의 수출 신장률을 가져왔다. GNP 대비 수출 비율은 이제 독일보다 더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북한의 경우는 1995년에 겨우 2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참고로 같은해 남한의 수출은 2,600억 달러

에 달했다. 1996년 상반기에도 북한의 수출은 8% 감소하여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기 북한과 남한에 대해 제공하는 정치적 지지는 남북한의 무역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대외 교역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는 미국이 그러하다. 북한과는 달리 구동독의 경우는, 비록 COMECON 내에서의 분업으로 인해 강요된 것이기는 하나, 국제 교역에 보다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역 관계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은 구서독과의 교

〈표 2〉 사회 지표 비교: 남한/북한 대 구서독/구동독(1989)

	남한	북한	남한/북한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구동독
평균 수명(1990, 세)	73.0	64.3	1.14	75.0	74.0	1.01
유아 사망률(1,000 신생아당, 1990, %)	12.8	31.3	0.41	7.4	7.5	0.99
농촌 인구(전체 인구중 점유율, 1992, %)	13.1	37.6	0.35	3.7	10.8	0.34
라디오 보유(천 명당, 1989, 대)	1,003	207	4.8	83%	99%	0.84
TV 보유(천 명당, 1989, 대)	207	14	14.8	94%	57%	1.65

자료: 통일원, 한국은행, 독일연방통계국.

- 주: 1) 구 동서독의 경우는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
- 2) 구 동서독의 경우는 컬러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

역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다. 고립주의를 추구한 결과, 북한은 국제적 기술 이전 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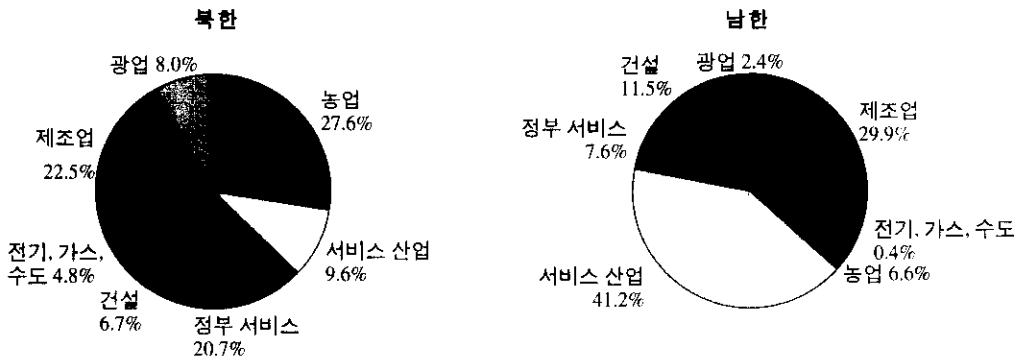
구동독이 북한에 비해 풍요롭고 발전해 있었다는 사실은 평균 수명, 유아 사망률 그리고 소비재 소유율 등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비해 구 동서독간 차이가 상당히 작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보다 많은 구동독 가정이 TV와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구서독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생활 수준이 이보다 훨씬 낮으며,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비재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북한 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은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광업을 포함하면, 1차 산업은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북한의 경제가 자연적인 힘에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의 흉작은 GDP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의 경우 3차 산업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40년 전의 농경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이제 산업 사회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차 산업의 GDP 점유율은 30%로 구서독과 일본에 비해 약간 높다. 이제 남한은 서비스 중심 경제가 되기 직전에 있다. 남한 경제의 강점은 정부 서비스 생산의 GDP 점유율(8%)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점유율(41%)이 훨씬 더 높다는 데서 알 수 있으며,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평균 이상의 점유율은 남한 경제의 상승 국면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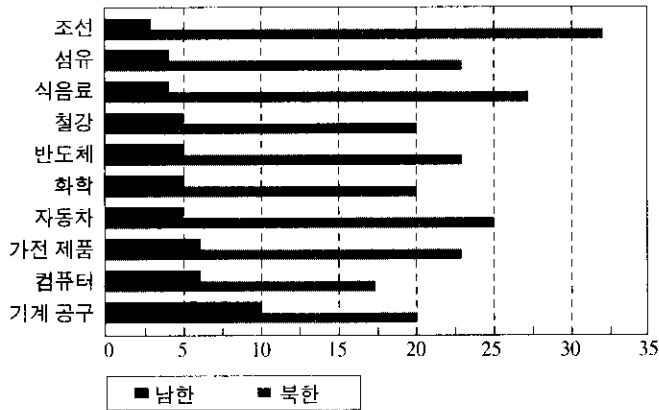
국내 수요의 약화는 북한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분야에 따라, 1994년 시설의 가동률은 25~40%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게다가 북한과 주요 선진국간의 커다란 기술 격차는 북한의

〈그림 3〉 경제 구조(1995년 GDP의 각 분야 점유율)



〈그림 4〉 남북한과 선진국간의 기술 격차

(연수)



자료: 한국산업은행.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기계 공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 보유국에 비해 약 3~6년 정도 뒤진 데 반해,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20년 이상을 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평균 노동 생산성은 남한의 약 25~3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독일의 통일: 값비싼 교훈

독일의 '빅뱅' (big bang)식의 급격한 통일은 주로 정치적·헌법적인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구소련의 동의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에 대한 우려는 뭔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켜주었다. 통일의 경제적 목표는 구동

독의 생활 수준을 구서독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당시 구서독의 인구는 구동독의 4 배였고, 구서독의 경제력은 구동독의 12 배에 달했고, 또 당시 구서독 경제가 호경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이전이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였다. 그러나 구동독의 경제적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고, 통계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낮은 생산성, 고갈된 자본 스톡, 낡은 인프라 시설, 과대한 2차 산업, COMECON 국가들과의 배타적인 교역 관계, 경쟁의 부재와 그에 따른 가격 왜곡 등은 당시 구동독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1990년 7월의 화폐 통합(당시 구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은 1 : 1.8로서,

구동독 화폐는 당시 비공식적 환율에 비하면 300% 정도로 가치가 올라갔음)과 구동독의 임금을 급속하게 구서독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기업들은 국내 시장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갑자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 생산은 60% 감소하였고, 고용도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게다가 단위당 노동 비용은 1991년부터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당시에도 아직 구서독 노동 비용의 136%에 달했다.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구동독 지역의 경제는 동유럽의 다른 전환 경제보다도 훨씬 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매년 실질 GDP 성장률이 8% 정도 되었으며, 생산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는 성장률이 2%로 낮아졌는데, 이는 구서독 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아직도 구서독의 56%에 불과하다(1991년에는 31%). 현재 구동독 지역의 생산은 독일 전체 GDP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구동독 지역에 새로 탄생한 연방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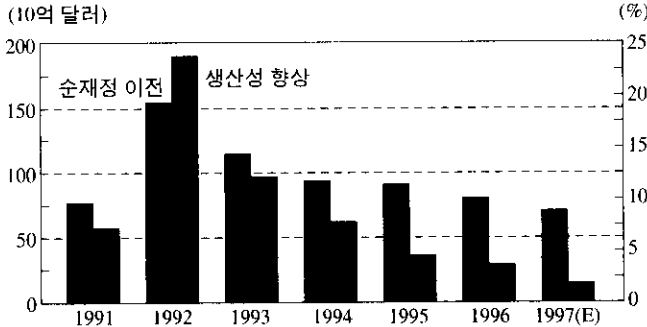
〈표 3〉 구동독 지역의 경제 수렴(1991~96)

(구서독 수준을 기준으로,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고용인당 실질 GDP	31.0	43.1	51.6	54.3	55.2	56.0
분야별 생산성						
제조업	19.6	32.1	42.5	49.0	50.7	-
건설	48.4	60.5	65.0	73.4	77.1	-
교통 및 통신	22.1	22.6	28.5	32.5	34.3	-
서비스	46.1	50.2	53.7	54.1	53.9	-
단위당 노동 비용(전분야)	153	142	135	134	135	136
제조업	192	162	129	130	133	-
건설	129	123	123	116	112	-
교통 및 통신	212	272	245	219	203	-
서비스	168	149	150	150	156	-
고용인당 실질 순임금	55	67	75	78	81	-
구동독 지역의 GDP, (10억 DM, 1991년 가격)	206	222	242	266	280	286
(GDP 성장률, %)	(-31.4)	(7.8)	(8.9)	(9.9)	(5.3)	(2.0)
분야별 성장률						
제조업	-	5.2	11.7	15.5	6.7	5.7
건설	-	30.4	12.8	24.5	8.4	-2.5
교역, 교통 및 통신	-	4.5	12.1	7.3	4.2	1.4
서비스	-	19.1	6.5	8.6	7.5	5.8

자료: 독일연방통계국, 경제자문위원회, DIW.

〈그림 5〉 구 동서독 재정 이전과 생산성 향상(순재정 이전 액수, 고용인당 GDP의 % 변화)



자료: 독일연방통계국, 경제자문위원회.

주: 1997년 수치는 1.5%의 GDP 성장률을 가정하여 자체적으로 추정된 것임.

들의 경제적 성장은 구서독 지역으로부터의 엄청난 재정 이전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1996년 말까지, 구동독 지역은 총 6,50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는 연간 재정 이전이 구서독 지역 GDP의 5% 이상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재정 이전의 3/4이 주로 소비성으로 사용되었지만, 구동독 지역의 1인당 자본 투자는 1992년 이래 구서독 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처럼 구동독 지역의 높은 투자율은(GDP의 50%) 동아시아의 투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공적 및 사적 투자율은 구동독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캐치업(catch-up) 과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이 자력에 의한 성장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1997년 구동독 지역의 GDP 성장률이 1% 정도로서, 구서독 지역의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년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구동독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구서독 지역 수준으로의 급속한 수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996~97년의 성장 수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특히, 1996년 구동독 지역 GDP의 40% 정도가 구서독 지역으로부터의 재정 이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이같은 성장의 둔화로 인해, 구동독 지역 경제가 구서독 지역 1인당 생산의 80%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과 건설업이 구동독의 경제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분야는 이제 구동독 지역 GDP의 19%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 제조업 분야는 독

일 전체 산업 생산의 6%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비공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철강, 조선, 화학, 정유 등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1996년 전체 근로자의 30% 가량이 아직도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 다만, 독일의 발달된 복지제도 덕분에, 그들이 재정적으로 그리 불안한 상태는 아니다.

국유 재산의 사유화는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소유권 반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사유화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진전을 보였다. 빅뱅식 급속한 통합은 단시일 내에 새로운 법적체계, 계약체계 그리고 금융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조건 아래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연방 주들은 처음부터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 한국 통일에 주는 시사점

북한의 거의 완전한 고립과 자력갱생 원칙은 매우 작은 수출 규모와 남한과의 직접

적인 접촉 부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북한측의 반복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1988년 이후에야 비로소 허용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따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최초로 설립한 이래, 2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대부분의 양자간 교역이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방 측면에 있어서 중국보다 20 년은 뒤지고 있다. 구동독에서의 상황은 이와는 달랐다. 구서독의 '동방 정책'은 두 체제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었고, 그로 인해 80년대에는 교역, 교통 그리고 특히 인적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서구경제체제는 아직도 완전한 수수께끼와 같다. 따라서 전환의 충격은 독일의 경우에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단지, 남북한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의 통일 과정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

〈표 4〉 양자간 관계(남북한간(1995), 동서독간(1987))

	한국 사람 수(건수)	독일 (건수)
여행	556(53)	2.41 m
통신(우편/전화)	1,222(494)	1.53 m
교역(백만 달러)	287	7,797

자료: 통일원, 독일정부정보국.



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한국 통일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남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식적' 통계는 아마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상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생산 구조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업, 공업 그리고 국방 분야에 현재 과잉 고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량 해고와 예상된다. 실업률은 3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 신속한 사유화와 서비스 분야의 확대만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토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사유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반환 원칙보다는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업자들은 약간의 기본적인 수당을 받아야 하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동독 지역에서와 같이, 경영 기법과 기술은 즉시라도 남한으로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해고된 노동력의 존재는 임금 비용이 높은 남한의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시설을 북쪽으로 이전토록 유도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해외 직접

투자를(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해왔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한 지역으로 다시 투자될 것이다.

자연 자원의 부족과 자본 집약적 산업의 발달이라는 특징을 가진 남한 경제와 많은 노동력을 가진 북한 경제는 독일의 경우에 비해 서로를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갖고 있는 비교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빨리 줄여져서는 안되며, 화폐 통합 과정에서 북한 화폐의 가치를 너무 빠르게 올려서도 안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 생활 수준의 격차가 신속하게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일 이후 남한은 얼마나 커다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북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통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통일이 2000년에 이루어지고, 북한의 소득이 10년 이내에 남한의 6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통일 후 10년 동안에만 매년 약 2,700억 달러(1996년 가격)가 필요하며, 그 이후까지의 지출을 합하면 모두 3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통일이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적 쇠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이보다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이 독일에서와 같은 수준의 재정 이전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정부는 통일 후 처음 6년 동안 매년 1,50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다. 여기서 단지 투자를 위한 재정 이전만을 고려한다 해도, 연간 재정 이전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95년 남한 총공공 지출의 2/3가 넘는 액수이며, GDP의 15%에 해당한다(독일의 경우 GDP의 5%에 불과했음). 과연 남한이 이러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과 달리, 남한의 경우 군사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매우 작은 공공 예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 감축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국방비를 현재 독일 수준, 즉 GDP의 1.4% 정도로 낮춘다면, 매년 100억 달러가 절감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 기구들로부터의 해외 재정 지원은 연간 30억~5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투자 목적만으로도 매년 550억 달러를 북한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 이는 급격한 세율 인상과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차관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 현재의 높은 저축률, 현재 GNP의 2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채, 그리고 매우 낮은 국공채 발행률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본 이전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

며, 또한 현재의 밝은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2000~2010년 동안 남한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5.5%,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 후 적어도 10년 혹은 20년까지는 성장률이 추정치에 비해 매년 2%포인트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남한의 위치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남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동시에, 양 지역간 성장률의 격차가 평균 5%포인트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절반 수준까지 달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보여진 것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률 격차를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 후 두 세대 즉, 60년이 지나면 남북한 지역간 소득이 동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도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統**